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 전방위 공세

오늘 ‘긴급 시국토론회’ 진행
‘사법 남용 규명 특검법’ 발의
14일 청문회… 탄핵은 속도조절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진행한

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다소 진정됐지만,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 원합의제 심리에 회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이날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는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급한 불은 끈 만큼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12일 ‘내란 재판’에 출석 모습 공개… 지상출입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 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영광 출신 서왕진 의원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전라남도 영광 출신인 서왕진(사진)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운하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서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검찰, 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 개혁, 제3 원내 교섭단체 실현 등을 통한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민생 입법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협상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종식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



민국을 만드는 길에 혁신당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원내의원단 간 소통을 강화해 의원단이 혁신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

도록 원내 역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1964년생으로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보·비서실장, 서울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과방위 청문회, SKT에 ‘위약금 면제’ 촉구

“국민 피해·정서 전혀 고려 안해”
최민희 위원장 “최태원 고발 검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회사의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과방위원들은 해킹 사태로 통신사를 다룬 곳으로 옮겨려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할지에 대해 SKT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 경고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손실 수천억 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며 “법률 검토를 사유로 드는데, 국민 피해나 국민 정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인가. 위약금을 주기가 싫은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객 우선이 아닌, SKT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

만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들은 여전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히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한다”며 “너희들이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의원들의 거듭된 위약금 면제 요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해석과 유권 해석을 하면 참고해서 이사회 및 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과장이 아주 커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지난 6일 과방위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해서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 등 법률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한덕수·국힘 지도부, ‘단일화’ 갈등 증폭

‘2차 담판’ 1시간만 종료…이견만 권영세 “11일 이전에 성사돼야”
金 “절차 따라야” 당 로드맵 거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당 지도부, 김 후보, 한 후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일화의 세 축인 당 지도부와 김 후보, 그리고 한 후보가 충돌하는 지점은 ‘시간’이다.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각 후보의 소속 정당과 기호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부터 9일까지의 여론조사를 거쳐 11일 이전 단일화하는 ‘로드맵’을 고수하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12일 이후 단일화에 대해, “만일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

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우리가 선거 운동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단일화 로드맵을 거부하면서 “시너지와 검증에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가 내세우는 주장이다.

공식 대선후보라는 점을 이용해 단일화 시점을 늦추면서 당 지도부와 한 후보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전날 김 후보와의 회담 직전 ‘후보 등록 포기’ 카드로 배수의 진을 친 데 이어, 이날 김 후보를 향해 11일까지인

당의 단일화 로드맵에 응하라며 적극적인 공세를 폈다.

이번주 안에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상태로 대선을 뛰어야 하는데, 당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력으로 레이스를 완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시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1시간만에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고, 김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한 후보께서)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활동 개시

“투자자 두텁게 보호할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가 8일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먹사니즘 위원회’ 내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약식은 (지난) 2007년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주식 18조원을 넘게 순매도해서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보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장터전,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경제 구조와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